

혁신도시 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는가

“열악한 지역경제 책임 질 유일한 대안”

한전 등 지방세 234억 지방재정 ‘숨통’ 기대
생산 효과 3조8천억원·고용 유발 3만여명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모범사례로 꼽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는 낙후된 광주·전남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미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제성 등을 명분으로 재검토 방침을 밝혀 모든 지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납부하게 될 지방세 234억원은 지방 재정 운용에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만 생산 유발효과 3조8천280억, 부가가치 2조1천50억, 고용유발 2만9천360명으로 추산되는 등 직·간접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나주 급전면 일대 주민들이 혁신도시의 토지 보상을 전국 최고인 95.7%까지 끌어올리며 적극 지지한 것도 지역 발전을 바라는 열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 혁신 도시는 기업 유치에도 견인차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광주·전남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관기업이 연쇄 이동할 경우 지역 경제의 토양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왜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는가. 우선 공동혁신 도시 건설사업은 열악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재정 자립도가 바닥권인 광주·전남도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17개 이전 기관, 인구 5만명 규모로 건설되는 공동 혁신도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전남의 인구 감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 전남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겨우 11.0%로 수년 동안 전국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도 47.8%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게 사실이다.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한전 등 전력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이 관건이다. 광주·전남 2000~200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7



“검역 주권까지 내준 쇠고기 협상”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21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우리나라의 쇠고기 검역권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잘못된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만 7천 명의 인구가 급감했다. 최연주 광주 공동 혁신도시 건설지 원단장은 “공동혁신 도시 건설은 열악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3개 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고용 유발효과도 4천59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민들이 정부의 한전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특히 한전과 한전 KDN, 한전기공 등 3개 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고용 유발효과도 4천59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을 연계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양회주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한전 이전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과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며 “정부가 혁신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재검토할 지 알 수 없으나 한전의 공동혁신도시 이전을 전제하지 않는 어떤 정책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 ‘쇠고기 청문회’ 열것

아권 쇠고기 협상 쟁점화

통합민주당 등 아권 진보개혁진영이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문제의 쟁점화를 통해 여당 독주의 정국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쇠고기 개방 문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도록 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대표적 민생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쇠고기 개방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내준 꼴이 됐다”며 “특히,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선물을 바치기 위해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 패배로 수세에 내몰린 민주당으로서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식탁’과 관련된 쇠고기 개방 문제의 쟁점화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내재된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 정파들도 민주당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수입개방 철회를 위한 야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쇠고기 개방협상과 연계된 한미 FTA 비준의 찬반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미묘한 엇박자가 표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손학규 대표는 쇠고기 전면 개방에는 반대하지만 한미 FTA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일종의 분리 대응 전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당내에서는 한미 FTA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놓고 당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서 FTA 문제를 둘러싼 당 지도부의 입장차가 대어투쟁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 대통령 ‘값 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 발언

전남 축산농가 강력 반발

정부 대책에도 불만

방일준인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국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따라 21일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서도 전남지역 한우농가들은 “정부 대책이 농가 출도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국농민회 전남도연맹 등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은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는 잘못된 ‘경제논리’만 강조한 것은 농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전국한우협회 등과 강력한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수행기자단과 가진 조찬간담회를 통해 “(미국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픈(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영석 전국농민회 전남

도연맹 사무처장은 “광우병에 대한 완벽한 검역체계를 비롯해 생산이력제, 원산지 표시제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쇠고기를 개방할 경우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수입산 쇠고기를 섞어 유통되거나 아예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한우 6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함모(56·나주시)씨는 “대통령이 농가의 처지를 살피기는 커녕 미국측의 입장만 두둔해서야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정모(63·화순)씨는 “기업은 살리고 농가는 죽게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정부가 동물성 사료를 먹여 키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김남배(51) 한우협회 전남도지회 회장은 “정부의 대책은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사면 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픈(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전남 AI 소강상태 접어드나

나주 닭·오리농장 밀집지역 ‘음성 판정’ 안도
낮 최고기온 20℃ 넘어서 재발 우려도 적어

전남지역 닭·오리 농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아직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곳이 18개나 남아있지만 AI여부로 이목이 집중됐던 나주시 공산면·세지면·산포면 등의 정밀검사 결과가 21일 AI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0도를 훌쩍 넘기자 더 이상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21일 현재 살처분 닭·오리의 수가 76만여 마리로 지난 2003년 22만여 마리의 3배를 넘는 등 피해가 막대한 만큼 농가의 근심과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닭·오리의 최대 사육지인 나주, 무안, 함평, 영암 등에 분포한 농가들이 정밀검사 대상에 들어있어 방역당국과 농가는 아직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나주지역 3개 농장의 집단폐사 원인이 대장

균증과 가금 티푸스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중인 다른 농장의 집단폐사 원인으로 AI 음성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 공산·세지·산포면 일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종오리 농장 등 닭과 오리농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들 3곳이 AI 양성으로 판명됐을 경우 100만마리 이상의 닭·오리를 살처분해야 하는 등 전남도내 가금류 산업의 파산마저 우려된 상황이었다.

다행히 정밀검사 결과가 AI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대량 살처분을 피할 뻔한 해당 농장의 이동제한이 풀리거나 일부는 검사 후 반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인근 다른 농장들도 초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 전남도내에서 집단 폐사 등으로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는 곳은 이날 AI 음성으로 밝혀진 3곳 이외에 나주 4곳, 영암 6곳, 무안 2곳, 함평·여수·화순·구례·목포·담양 각 1건 등 모두 18곳에 이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장 우려했던 나주에서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일단 한 고비는 넘긴 셈”이라면서 “낮 평균기온이 오르고 있어 재발생 우려도 적고, 다른 지역의 정밀검사결과도 양호하게 나와 이번 AI사태가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품려, 신뢰, 교양이 있는 신문
격동의 현대사를 지켜온 증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7월 15일 창간한 광주일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7월 15일 창간한 광주일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7월 15일 창간한 광주일보

광주일보 창간 63주년 기념
특별기획
[담양군청]
합치위원회